

영남엔 굵직한 신규 사업 호남은 기존 사업들 재탕

국토부 2009 업무보고 불균형 심화 우려

국토해양부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등 내년도 중점 사업을 선정하면서 호남권은 기존 사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부산·경남 등 영남권에는 굵직한 신규 사업들을 포함시켜 지역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4·11면〉

이는 F1 대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 호남권을 제외하고 광역경제권 핵심 산업을 발표한 지식경제부 등의 행태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호남 배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도 SOC 예산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호남권은 기존의 사업을 재탕하는데 그친 반면 부산·경남 등

영남권은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부산 북항 재개발 하부 구조 사업은 8조5천억원을 투입, 계획보다 4년 앞당겨 완공키로 했으며 동남권 신공항(2조원대)은 내년 9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입지선정·실시설계 등을 통해 오는 2011년 착공키로 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1천억원을 투입, 댐 물을 끌어오고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대구와 부산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도 재개발하기로 했다. 부산 신항(웅동지구)도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결과 부산 북항 조기 재개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 등 호남권 사업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새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내년 말까지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현 정부 지역정책 발표때 단골 메뉴로 제시되는 여수엑스포 지원 사업과 참여정부에서 시작, 이명박 정부에서 확장된 민자 95%의 서남권 개발 계획을 호남권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광주 제3순환도로 건설도 호남권 사업으로 포함했다. 또 국토부는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역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면 반발하고 있다.

즉 F1 대회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사사건건 광주·전남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와 호남권을 배제하고 광역경제권 핵심 산업을 발표한 지식경제부 등 정부 내부의 '호남 배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이번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정부의 지방 정책의 방침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균형 있고 세심한 지방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순천만의 해넘이

한 해가 저물어간다. 마지막 저물어가는 해에 회한을 실어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기원하는 시기다. 22일 순천만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이 빼어나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 선정

국토부, 공공주택 전매 제한 1~5년으로 축소

농협중앙회장 인사권 박탈 명예직화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10대 프로젝트에 국가재정 14조 8천억 원과 민자 등을 포함 총 45조 원이

조기 투자되고 내년도 전체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된다.

또,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 공무원을 자동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농협 중앙회장의 인사권도 박탈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5년으로 줄이고,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패지돼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점에서 고위 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을 경우, 직격심사를 통해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으로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박탈, 명예직으로 바꾸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도 이날 내년에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4만3천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 시설 예산 2조4천646억원과 연구개발 예산 1천974억원, 민간융자 예산 1천600억원 등 주요예산 2조8천417억원 가운데 1조8천154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공직자가 선도에 서야 한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대열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자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사회가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개각 등 인사 개편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건평·박연차씨 등 기소

검찰, 세종증권·휴켄스 비리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응석 검사장)는 22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켄스 매각 비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을 구속 기소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김형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흥기옥 사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흥 사장으로부터 노씨를 통해 로비해 달라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 등 2명과 오세환 농협 상무 및 태광실업의 정승영 전 휴켄스 인수담당자 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중수부는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켄스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100억원대 금품 로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34일 만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2006년 정치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 총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노씨는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원과 아들에게 회사 주식 1만주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함하고, 회사돈 15억원을 빼돌려 리얼아이디테크놀로지 주식 매수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흥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남 전 농협사료 대표가 운영하는 IFK사의 자본수수료로 가장해 송금받은 혐의 및 박 회장으로부터 휴켄스 매각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고 태광실업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켄스 주식 처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 등 총 290여억원의 세금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필뉴스

"5+2 수정·보완 땀 수용"

광주시·전남도 협상 가능성 시사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 대해 호남권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선도산업 참여를 거부하면서 경제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22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확정 발표와 관련, "정부가 균형발전 전이라고 하면서 발전의 기반이 닦인 영남에 2개의 경제권을 주고 가장 낙후된 호남지역에 1개 경제권을 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호남지역에 배정된 선도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전남의 J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라며 "광주의 제3순환도로 건설도 이미 완공되는 SOC사업이므로 광주는 아무것도 해달라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의 틀을 고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도산업의)내용을 수정해줄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민과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납득할 수 있는 알

맹이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하며, 광역경제권의 틀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송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호남의 선도프로젝트가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광주에 배정된 새로운 산업이 없으며,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호남의 선도프로젝트에 다른 산업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5+2 구상을 수정하면 다른 지역이 반발할 수 있는데다 중앙정부와 계속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광주시와 공동으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009년 시장 운영 방향을 '경제권 극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녹색성장, 해양경제권 실현'으로 설정,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철 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외환위기 넘겼다" 잠정 결론

정부가 지난 석달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는 넘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6면〉 국제 금융위기에서 전이된 실물경제의 침체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중되고 있지만 달러 부족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는 이제 사라졌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엄청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재발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2일 "적어도 외화유동성 문제는 넘겼다. 국내외 여러 지표나 평가, 시장상황 등을 분석했을 때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외환위기가 재연될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과 한달전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은행과 기업들이 달러를 확보하느라 혈안이었던 상황은 종료됐으며 흐름상 앞으로도 달러 유동성 문제는 여유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실제로 요즘 시중에는 달러화가 넘치면서 긴급한 달러 수요도 사라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각각 240억 달러와 100억 달러 등 총 34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최근까지 300억 달러 가량이 시중에 풀렸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11월21일에 장중 기준 1.525.00원까지 올라선 이후 한 달여 만에 1.454.00원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에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CU Leader Project

CU Leader-A
4학년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CU Leader-B
4학년 2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공학특성인정 취득

가공,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자원개발특성대학 선정

가공,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주요 사업: 1. 교육개혁 2. 연구개발 3. 사회봉사 4. 취업지원 5. 장학사업

2009년도 정기 11월 19일(수) 09:00 - 12월 24일(수) 17:00
신청장소: www.chosun.ac.kr 문의: 062-220-41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